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서훈 당위성 정립

“항일운동 기점, 일제 경복궁 점령사건”

올해로 동학농민혁명이 제1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국회 농해수위)이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바로잡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의 당위성을 정립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김은덕·서삼석·안호영·민형배·박수현·복기왕·이원택·박희승·이성운·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명계승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명계승사업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환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박용규 연구위원은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이 된 역사적 사건이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인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며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국회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윤준병·정동영·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토론회

“입법부에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의해 1990년부터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에서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뀌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

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바다 교수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인 점을 피력하며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 기준상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남경국 소장은 헌법적 관점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우리의 헌법정신과 궤를 같이 하지만 참여자의 서훈과 예우는 행정과 사법의 소극적 판단에 지금까지 막혀 있다”라며, “입법부에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러진 토론에는 신영우 충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현환 이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공동주최 의원 및 각계 전문가와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축사를 보내오는 등 큰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만호 기자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피해자 사망·상해시 가중처벌

국힘 조배숙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며, 기소된 인원도 2,748명으로 전년 2,181명에서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미성년자 대상의 성 착취 그루밍·강간의 가중처벌과 달리 스토킹 범죄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구분 없이 일률적인 법정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단순 집착으로 보이다가도 범죄자가 가진 잘못된 사상과 집착이 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며, “특히 그 대상이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를 감히 헤아릴 수 없기에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 나선다

문승우 의장 등, 28일 국회 방문해 의원정수 확대 등 건의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장 문승우)가 도의원 정수 확대를 비롯해 도의회 관련 특례 마련에 역량을 모은다.



문 의장은 이어 “도의원 정수 확대는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제주자치도의회가 특례로 의원정수를 늘린 사례가 있어 전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북 연고 의원 등을 만나 의원정수 확대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문 의장의 공약 사항으로, 도의회는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로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문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어나는 등 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의원 정수를 늘려 변화하는 자치입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과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농촌지역 소멸위기 극복 위해 생활인구 늘리자”

임종명 전북자치도의회, ‘농어촌워킹 홀리데이 in 전북’ 서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최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생활인구(관계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9개 전체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는 약 2,500만명이었고, 이중 체류 인구는 약 2,000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 400만명의 4.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전북연구원 조원지 박사의 관계인구를 통한 농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임종명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박기연 임실 마을 가꾸기 협의회 사무국장, 이귀보 참여자, 최규해 남원 공동체 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처럼 전문성을 가진 50+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첫걸음이자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임종명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제적 어려움, 주택 및 기반 시설 노후화, 행정의 무관심 등 농어촌 문제를 꼬집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생활인구(관계 인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

이어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교통환경 개선, 디지털 인프라 강화, 체류형 농장·마을 조성, 커뮤니티 활성화 및 플랫폼 구축과 세계 혜택 경쟁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사회 유지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 도시민 등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생활인구 유입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이어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교통환경 개선, 디지털 인프라 강화, 체류형 농장·마을 조성, 커뮤니티 활성화 및 플랫폼 구축과 세계 혜택 경쟁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사회 유지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 도시민 등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생활인구 유입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한경봉 시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 노동조합연맹 감사패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와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13일 의정실에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약칭 시군구연맹, 위원장 공주석)에서 수여하는 감사패 수상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7월 열린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책 인상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로 시의회 단체 및 개인 의원의 감사패를 받았다.

특히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책 인상 촉구 건의안’은 고위직급과 하위직급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물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미반영된 물가상승률을 반영, 하위직급 공무원의 기본급을 정책 인상하라는 내용이다.

김우민 의장은 “이렇게 시군구연맹에서 우리 의회, 그리고 한경봉 의원에게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직원들이 행복해야 일에 능률이 오르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기에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소통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봉 의원은 “현재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공직사회 지원을 저하, 잦은 퇴직 등 공직사회의 문제가 심각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임금이 정책 인상에 등 하위직급 공무원에 대한 인식 변화로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직에서 근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책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군산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아권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지정에 협조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본 사도광산 강제 동원의 진상규명과 역사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협조尹정부 규탄”

전주시의회 아권 의원들, “진상규명·역사적 책임 이행해야… 독립기념관장 임명 즉각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등 아권 소속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곳으로 지난날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 굴종 외교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이제라도 강제 동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아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사도광산 강제 동원의 진상규명과 역사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도 저자에 굴종 외교를 버리고 일본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동안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곳으로 지난날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됐다.

이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곳으로 지난날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됐다.

이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곳으로 지난날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됐다.

“전북 K-방산 육성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필요”

전북 백년포럼 제9강… 이견혁 LIG넥스원 초청 특강

전북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방 분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방산의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3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K-방산의 미래 혁신’을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9강을 개최했다.

이 부사장은 국내 방위산업 분야 기업의 수출 품목 및 시장 경쟁력을 설명하고, 육·해·공·우주 전 영역으로 통합되는 미래 전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산업 육성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 강연자는 LIG넥스원 이견혁 부사장으로 한국 군사과학 기술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미래 준비 사업 분야로서 우주(위성), 우주인 복합체계, 해양 감시 체계, 개인 전투 능력 강화 분야가 주목된다.”며, “전북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남호 원장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의 가능성을 가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북 백년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 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과 관계기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